

“네이버 16개 법인 따로교섭 끝내자” 노조, 본사 참여 통합교섭 요구

IT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
결정권 행사 범위 ‘핵심 쟁점’

네이버제트, 쟁의 행위 가결
파업 시 그룹 출범 來 첫 사례

20일 통합교섭 공식 요구 예정
업계 노사관계 새 모델 만드나

네이버 노동조합이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16개 법인에서 연간 150회에 달하는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과 보상,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네이버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구조 역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제트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지회는 2018년 출범 당시부터 계열사를 포괄하는 형태로 조직됐다.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약 62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을 진행하는 곳은 16개 법인이다.

노조에 따르면 16개 법인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면서 연간 약 150회의 교섭이 이뤄지고 노사 교섭위원 100여명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오세훈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은 본사에서”…네이버 사용자 책임 쟁점으로

노조가 통합교섭의 근거로 내세우는 핵심은 네이버 본사의 영향력이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 8월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공동성명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의 임금교섭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부 지회사는 사측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본사 합의 이후 평균 한 달 이내 비슷한 수준과 문구로 협상이 타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추가 보상제도와 근무 형태, 복리후생 등에서도 계열사들이 공통적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사옥 이전과 재택·오피스 근무 선택제, AI 조직 재편에 따른 계열사간 인력 이동 등에도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도 통합교섭 추진의 주요 근거다. 개정법은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네이버가 모든 계열사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자동으로 교섭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재원이나 인사, 평가·보상 등 개별 근로조건에서 모기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교섭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교섭에서는 네이버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제트 쟁의권 확보…그룹 첫 파업 가능성

통합교섭 논의와 맞물려 계열사의 노사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

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네이버제트 사측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연봉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킥오프’ 행사를 열고 공동 교섭 의제를 공개한 뒤 이달 말 네이버 측에 통합교섭 개시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하면 IT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사업별 독립법인을 두고 임금·인사 교섭 역시 법인별로 진행해왔다. 반면,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모기업에 집중된 경우 교섭 구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계열사별 경영 독립성과 본사의 사용자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팩토리 등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통합교섭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관리 부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조가 통합교섭을 IT 업계 노사관계의 새로운 ‘판교모델’로 만들겠다는 입장인 만큼 오는 20일 선포식 이후 네이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OECD 주요 국가 중)

통신3사, 최저 수익성에도 AI·6G 투자까지 ‘이중고’

지난해 4분기 EBITDA 마진 22.0%
통신3사 영업이익률 7.1% 그쳐
6G에 年 6조, AI에도 대규모 투자

국내 통신3사가 해외 주요 통신 기업보다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간한 ‘2026 이동통신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EBITDA 마진율은 매출액 가운데 법인세,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로 기업이 얼마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2025년 4분기 기준 한국의 EBITDA 마진은 22.0%로 OECD 주요 20여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31.69%, 38.02%로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16%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1~2025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1%에 그쳤다. 반면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AT&T·버라이즌은 19.6%로 국내 통신사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내 통신사가 매출에 비해 영업에서 남기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통신망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국내 통신 3사는 매년 최소 6조원 이상의 설비투자(CAPEX)를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5G 망 투자가 집중됐던 2019년보다 줄었지만, 앞으로 6G 상용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예측한 올해 통신 3사 합산 설비투자액은 SK텔레콤이 2조3900억원, KT 2조1600억원, LG유플러스 2조200억원이다.

6G는 기존 5G보다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기지국뿐 아니라 소형



AI에 의해 생성된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통신업계 이미지.

기지국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지 임차료와 인허가 비용, 전력 공급, 전송망 연결, 유지보수, 장비 교체 등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망 세대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전환(AX)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초기 투자 부담도 크다. KT는 5년 내 AX 플랫폼 기업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에 5조원(1GW 규모)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설립한 AIDC 전담 자회사 SK하이퍼에 투자하는 금액이 올해만 해도 3300억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건설 중인 AIDC는 1개 동 건물 구축 비용만 약 610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남기면서 통신망 설비 구축과 신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에 전파사용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정부가 지난해 산정한 3G·LTE 주파수 재활당 대가는 최저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2분기 KT는 매출 6조6799억원, 영업이익 6483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5660억원을,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6949억원, 영업이익 344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 msjo@

LG CNS-DAI,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지원
연구 데이터 쌓일수록 AI 예측성능 ↑

LG CNS가 제약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

LG CNS는 동아쏘시오그룹 IT 계열사 디에이아이(DAI)와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신약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주요 연구 과정을 AI로 지원한다. 양사는 약 6개월에 걸쳐 구축을 완료했다.

신약 개발은 다수의 후보물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통상 10~15년이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큰 분야다.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선별하고, 후보물질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AI 예측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학습해 연구 데이터

가 쌓일수록 AI 예측 성능이 높아지는 게 특징이다. 제약산업의 규제와 보안 요구 사항을 고려해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도 적용했다.

플랫폼은 신약개발의 주요 연구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질병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세포별 유전자 정보와 조직 내 위치 정보를 AI로 분석·시각화해 치료 표적 탐색을 돕는다.

후보물질 설계 단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연구 조건에 맞는 물질 구조를 설계한다. 이후 검증 단계에서는 후보물질과 표적 간 결합 가능성, 작용 안정성 등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다. 실제 실험 전 컴퓨터 환경에서 후보물질을 가상 검증해 유망 물질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LG CNS는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 실험, 검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신약개발 효율과 연구 품질을 높이는 데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공공부문에 AW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생성형 AI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LG유플러스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중개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전용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엘지유플러스 중개서비스 for 아마존웹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사 서비스를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자사의 IaaS는 ‘엘지유플러스 중개서비스 포(For) 아마존웹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 등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 상담·업무 지원 챗봇, AI 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 통계·행정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인공지능 전환(AX) 등의 역량을 활용해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도입 초기 최적의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혁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